

# 李대통령 “검찰, 되도록 않는 것 기소해 국민 고통” 검찰청 폐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찰이 되도록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혹시 무죄이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지고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에 무죄는 낫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 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이 ‘중대하고 예외적인 사건을 빼놓고는 상고 금지’를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중대 사건이든 경미 사건이든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건 똑같다. 대중이 흥분한다고 없는 사람 잡는 게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해야” 장동혁 “공직선거법 사건 무죄 만들려”

이어 “엄한 사람 잡았다 사형시킨 것 아닌가. 죽은 사람은 어떡할 것인가”라며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인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닌가. 윤수 아닌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지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으로 가면 유죄가 날 게 100% 뻔하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만들고 상고를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여 만에 폐지된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에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뉴시스

## ‘국정자원 화재’ 647개 시스템 중 87개 복구... 1등급 58% 정상화

김민재 행안차관, 국정자원 화재 브리핑 “무인민원 발급기 정상화... 큰 혼란 없어”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총 647개 정보 시스템(서비스) 중 87개가 복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민 과급력이 큰 1등급 업무는 58.3%가 정상화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을 갖고 “화재 이후 정부와 관계 기관이 밤낮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복구를 진행 중이지만,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들을 생각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전체 목록과 정상화 여부, 대체 수단도 함께 제공해 기관과 국민의 불편을 줄여

나갔겠다”며 “다만 이번 화재로 국정자원의 관리 시스템 활용이 어려워 시스템 개수가 상이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대전 국정자원 내 전산실별 시스템 현황도 안내했다.

대전센터는 2층부터 5층까지 모두 9개의 전산실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이번엔 화재가 발생한 5층에는 7, 7-1, 8전산실이 위치하고 있다.

또 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7-1

전산실은 96개, 나머지 7전산실은 200개, 8전산실은 34개 등 총 330개 시스템이 위치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는 전체 648개 시스템 중 51%를 차지하는 것이다.

김 차관은 이날 “지방자치단체 현장점검 결과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국민께서 자주 많이 활용하는 각종 민원 처리는 정부24, 무인민원 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다소 불편하지만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라

고도 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일부기능 장애로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돼 국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기로 처리하는 등 불편은 존재했다”며 “시스템 복구와 대체수단 안내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스템 복구에 보다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차관은 “화재 영향이 적은 2-4층에 위치한 시스템들은 재가동이 이어가고, 7-1전산실을 제외한 5층에 위치한 시스템들은 분진 제거 후 재가동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 피해 입은 7-1전산실의 96개 시스템에 대해서도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민간기업 협력 등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예산정책협의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더불어민주당 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전남도·민주당, 지역 현안 해결 ‘맞손’

예산정책협의회 통해 내년도 국비 확보 협력하기로

전남도도와 더불어민주당이 굽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남도는 30일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를 통한 숙원사업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 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권향영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주철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박지원·이계호·신정훈·김원이·조계원·문금주·김문수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전남도에서는 김영록 도지사와 주요 간부들이 자리했다.

전남도는 이날 정책건의 사업 10건·법률건의 사업 5건·국고건의 사업 10건을 설명하며 내년도 국고 확보와 입법 활동, 제도개선을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정책건의 사업은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대 신속 신설 및 대학병원 설립, 솔라시도 인공지능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 광양·순천 일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아시아 태평양 해상풍력 허브조성, 우주발사체 특구 내 제2우주센터 조성, 무안 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공항 육성,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육성 등이다.

법률건의 사업은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특례 반영, 전남도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이다.

국고 현안 사업은 전남 SOC 사업

국고 지원, 국립 김 산업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단지 구축,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등이며, 전남도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국비 추가 증액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오랜 염원인 전남 국립의과대학이 2027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지를 부탁한다”며 내년 2월까지 100명 이상의 의대 신설 정원을 배정받아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대가 개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도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허가권 등 맞춤형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전남 발전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호남권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전남 SOC 계속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 SOC 예산 국비 3400억 원 이상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특별한 회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이행을 위해서는 호남에 표시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광주 송정-목포간 호남고속철도 조속 완공 및 객차량 운행횟수 확대 등 개선, 목포-순천 통합의과대학 신설 조속한 마무리, 김을 K푸드 선도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김산업 진흥원 설립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철근 가공 및 도소매

이형봉강 · 철근공장 가공 커플러 shop-DWG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동로 134  
T 062-716-3488 F 062-716-5888  
E sambu6488@naver.com W sambu6488 / 1234

삼부철강(주)

